

AI 대세론 뒤의 거짓 신화¹

고아침 / AI 윤리 레터 / 운영진

AI(인공지능)가 인간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며 AI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AI는 새로운 전기요 새로운 산업혁명이고 AI를 떠받치는 데이터와 GPU는 새로운 석유라는 수사가 차고 넘친다.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관점(편의상 'AI 대세론'이라 부르자)을 잘 요약해준다.²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에 관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코멘트했다.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유보하고, 이 표현이 환기하는 이미지를 잠시 그려보자. 노조 쪽으로, 나아가 우리 사회 쪽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수레.³ 그 수레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대체 누가 이 수레를 만들었고, 우리를 덮치는 방향으로 수레를 굴러 보냈나? '수레'의 비유는 (발화자의 의도와는 거꾸로) AI의 불가피성을 재검토하게 해주는 절묘한 표현일지 모른다.

기술 하이프의 이념적 작용

AI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대세인가? AI 이전 메타버스나 암호화폐에 대한 유사한 열풍과 사회적 투자가 과연 얼마나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는가? 어떤 기술이 모든 것을 뒤바꾸리라는 예측은 언제나 들려오지만 많은 경우 이들 전망은 현실화하지 않는다.

사실 기술 전망의 맞고 틀림은 어떤 의미에서 부차적인 문제다. '예측'에 최종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서사, 일종의 구호이기 때문이다.⁴ 오늘날 기술 개발은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관심과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기술에 대한 열광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술산업의 중요한 작동 기제다. 기술은 자주 과대선전되며, 이를 지칭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도 있다. AI 대세론은 요즘 가장 핫한 기술 하이프다.

AI는 단지 기술적, 물질적 층위에서만 아니라 문화적, 이념적 층위에서도 작동한다. AI 대세론은 AI 기술 산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현실이 불가피하며 또한 바람직하다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확산한다. AI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선택지는 순응 혹은 낙오만 남는다. 사회 전방위적인 AI 도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뿐이다.

¹ 본 발제문은 고아침, “‘발전’의 희생양 말고 ‘권력’의 주체 되기”, <ACT!> (발행 예정)을 일부 수정·인용하였다.

² 정환보,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경향신문 (2026.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2042005/>.

³ AI 윤리 논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광차 딜레마'가 떠오르는 광경이기도 하다.

⁴ 과학기술과 미래 예측 담론의 관계에 관해서는 전치형, 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문학과지성사 2019) 참고.

기술기업에 경제·사회·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술에 영향 받는 대다수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저하하는 AI의 작용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이런 AI 기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AI 기술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AI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자체를 의문시해야 한다. AI 대세론을 구성하는 각종 신화를 해체하고, 기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상을 중심에 놓는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화 1: AI 과대평가하기

AI 대세론을 구성하는 일련의 신념 유형을 살펴보자.⁵ 첫 번째는 AI에 대한 과대평가와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AGI(인공일반지능)·초지능 신화가 있다.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달성이 임박했다는 서사로서 AGI 신화는 AI 기술이 사실상 무한한 효용과 성장을 가능케 하리라는 기술 맹신을 떠받치는 동시에,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멸종을 가져오리라는 종말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AI 맹신과 AI 종말론은 얼핏 반대로 보이지만,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쪽 모두 AI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관리하는 데 사회적, 인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추상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지향점으로서 AGI는 AI 산업에 대한 각종 비판을 잠재우는 만병통치약 역할을 한다. AGI는 너무나 큰 효용(예: 기후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비용(예: 데이터센터 구축의 환경 영향, 정책적 기회비용, AI 구축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 등)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GI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시피 하며 AGI라는 개념 정의 자체도 모호하다.

AI 과대평가의 또다른 형태는 AI 생산성 신화다. AI 기술이 막대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AI 기술 고도화, 생산성·성장, 사회적 효용은 서로 다르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 설령 AI로 생산성이 늘어나도 그 이익은 기업에 돌아가며, 노동자·대중이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AI 대세론은 'AI = 생산성 = 공익'이라는 등식을 의심하지 않는다.

AI 생산성 신화는 자연스레 노동의 대체, 나아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전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AI 도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때도,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전제는 곧잘 당연시되곤 한다. 하지만 AI 도입은 완전한 자동화 및 노동 대체보다는 (무인계산대가 계산원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계산원의 노동을 고객에게 옮긴 것처럼) 노동의 위치를 이전시키고 비가시화하는 것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업무에서 생성형 AI 결과물을 인간이 뒷처리하는 '워크슬롭' 현상에서 드러나듯, AI 생산성은 당연하지 않다.

신화 2: 선형적 기술관(지금의 트렌드가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술 경로라는 믿음)

⁵ AI를 둘러싼 담론적 신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ate Brennan, Amba Kak, and Sarah Myers West, "Artificial Power: AI Now 2025 Landscape", AI Now Institute, June 3, 2025, <https://ainowinstitute.org/2025-landscape>.

AI 대세론은 기술 발전을 선형적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과 경로는 하나뿐이며, 문제는 얼마나 빨리, 많이 발전하는지다. 국가의 '기술력'은 줄세우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선형적 관점은 '규모(스케일) 우선주의'로 드러난다. 'AI 스케일링 원칙'은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투입해서 더 많이 연산하면 결과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말하며, 현재 AI 개발의 중요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규모'에 올인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AI 기술의 경로가 존재하며, 규모를 키워서 얻는 '성능'이 '사회적 효용'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AI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한 빅테크 기업은 자본과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AI 구현 방식인 규모 중심 접근에 크게 베팅한 상황으로, 대안적 기술 경로를 탐색하기보다는 현재 패러다임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 인프라는 이러한 빅테크 전술을 한국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구조에서 AI 기업의 위험은 정부 지원, 규제 철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에 전가된다.

신화 3: AI 국가주의

AI 대세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신화로, 기술 패권·기술 주권을 중시하는 일종의 지정학 중심주의를 여기서는 AI 국가주의라고 부르기로 한다.⁶

이 관점에서는 경제적·군사적 안보가 중요하며,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산업 동력이자 군사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술 생산 주체인 산업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자산이 되기에, 산업-안보는 실질적으로 동일시된다. 앞서 살펴본 AI 과대평가 및 선형적 기술관과 맞물린 AI 국가주의에서 AI는 필수이자 다다익선이다.

국제적으로 AI 국가주의가 미-중 AI 군비경쟁으로 발현되는 한편, 한국에서는 '소버린 AI'를 추구하고 있다. AI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고, 따라서 AI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데이터, AI 설계 등 전 영역에서 자체적 역량을 확보하여 기술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⁷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작년말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담긴, "글로벌 AI 3강'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과제"라는 표현에서도 AI 국가주의를 엿볼 수 있다.⁸ 한편 AI 국가주의는 탈규제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업계의 이익과 국익을 동일시하는 안보 구도에서 업계에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데이터 보호, 반독점 등)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같은 안보 논리는 규제를 혁신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정적 규제 환경의 장점을 외면하는 혁신-규제 이분법과 결합하여 산업 진흥 외의 정책적 개입을 어렵게 만든다.

불가피성의 신화를 벗겨내자

⁶ AI 국가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mba Kak and Sarah Myers West, eds., "AI Nationalism(s): Global Industrial Policy Approaches to AI", AI Now Institute, March 2024.

⁷ 하지만 완전한 소버린 AI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애초에 소버린 AI는 엔비디아가 시장 확장을 위해 내세운 용어로, 칩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AI 주권'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⁸ https://www.aikorea.go.kr/upload/contents/contents_01.html

AI 대세론, AI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지탱하는 기술 만능주의, 기술 경로에 대한 선형적 이해, AI 국가주의 등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만들어진 신화에 가깝다. 이 신화는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이들 신화가 진리인 것은 아니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프레임 하에 기술기업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시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AI는 거스를 수 없다'는 명제가 객관적 현실이 아닌 '담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어진 기술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주어진 기술이 어쩌면 가져다줄 혜택을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을 상수로 고정하고 사회와 사람을 그 작용에 끼워 맞추려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술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를 방해하는 기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